

김영록 전남도지사, 민주당에 쌀값·특별자치도 등 현안 건의

예산정책협의회서 정책 4건·법률 5건·국고 12건 협력 요청 SOC 1조 이상 확보·국립의대 설립·국가 출생수당 등 강조

전라남도는 9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전남도-더불어민주당 간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지역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협의회엔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정 예결위원장, 신정훈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등 지도부 주요 인사와 전남도 당 주철현 위원장, 이개호·서삼석·조계원·김문수·권항엽·문금주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협의회에서 정책 건의 4건, 법률·제도 건의 5건, 국고 건의 12건을 설명하고 "전남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핵심 성장축으로 당당히 자리잡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의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협조를 구했다.

산지 쌀값 안정과 관련해서 "2023년산 전국 쌀 11만 톤 이상 재고 발생이 예상돼 적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쌀값 하락 지속이 전망

된다"며 "2024년산 신곡 쌀값 20만원 이상 보장을 위해 공공비축미 외에 선제적 시장격리 등 정부의 과감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 '전남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해서 "올해 3월 전남 인구 180만 붓고, 고통화를 전국 1위 등 위기가 현실이 돼간다. 에너지·관광·농어업·첨단산업 등 비교우위 산업의 권한을 대폭 확대해 지역 주도의 새 모델을 만들겠다"며 특별법 제정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지역의 경제발전과 관광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호남권 미래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강조하고 "강진~광주 고속도로(광주~완고 고속도로 1단계), 호남고속철도 2단계 등 지역 핵심사업을 계획기간에 완공하기 위해서는 '2025년 전남 사회간접자본 사업 1조 원 이상 확보가 필요하다"며 "국회 심사과정에서 2천억 원 이상 증액을 위해 협력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외에도 전라남도 국립의과대

학 설립, 국가 출생수당 신설 및 사회보장제도 개선, 미래첨단소재 국가산단 및 특화단지 지정 등 현안을 설명했다.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선도할 '재생에너지 4법' 제정,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및 '인구감소지역법' 개정, 기회발전특구 조세특례 혜택 도입, 남해안종합개발청 설립 및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 등 법률과제도 건의했다.

또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립 김 산업진흥원 건립 ▲케이(K)-디즈니 조성 위한 인력양성 및 콘텐츠 제작 지원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 지원 ▲예비 타당성 조사 중인 광양 공업용수 공급사업 및 화순군 폐광지역 경제진흥 개발사업 ▲인공지능 첨단 축산업 융복합밸리 조성 ▲간척지 활용 첨단 수산양식 배후단지 조성 ▲미래에너지 반도체 산업지원 플랫폼 구축 ▲민간전용 우주발사체 엔진연소시험시설 구축 ▲수출촉진형 복합에너지 퓨처랩 MG 플랫폼 구축 ▲국립 민속씨름원 건립 ▲2025 국제농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협의회에서 정책 건의 4건, 법률·제도 건의 5건, 국고 건의 12건을 설명하고 "전남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핵심 성장축으로 당당히 자리잡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의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협조를 구했다. /전남도 제공

업박람회 개최 지원 등 현안 사업이 반영·증액되도록 협력을 요청했다.

김영록 지사는 "정부의 강력한 긴축재정에도 민주당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내년 정부 예산안에 전남 미래 100년을 책임질 신규사업 47건을 비롯한 8조 9천억이 반영됐다"며 "건의사업이 전남 대도약의 기폭제가 되도록 당 차원의

특단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에 김민석 최고위원은 "쌀값 인상, 출생 기본소득, 혁신 신산업 부흥 등 전남의 핵심 현안사업이 민주당의 브랜드 정책과 일치한다"며 "당의 브랜드 정책을 전남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소멸 위기 극복 '전남특별자치

도' 설치에도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여·야 지도부 및 지역 국회의원 등과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국회 예산 최종 의결까지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된 사업 예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서용은기자

광주시, 교통비 지원 '광주G-패스' 내년 시행

보건복지부와 협의...광주교통공사와 위·수탁 협약

광주형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인 '광주G-패스'가 내년 1월 본격 시행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9일 광주교통공사와 '광주G-패스' 시행을 위한 정산업무 등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광주교통공사는 교통카드 단말기 조정 등 준비를 거쳐 내년 1월 '광주G-패스' 서비스를 시

작한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달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쳤다.

'광주G-패스'는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광주시민 모두가 맞춤형 교통비를 지원받아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는 교통정책이다. 시내버스·마을버스·도시철도 이용요금을

어린이는 무임, 청소년은 반값, 청년은 30%, 일반성인은 20%, 어르신은 50%, 저소득층은 64%까지 할인 또는 환급받는다.

어린이(6~12세)와 청소년(13~18세)은 광주시가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성인(19세 이상)은 K-패스와 연계해 정부 지원에 더해 광주시 지원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편의점 등에서 교통카드를 구입해 등록한 뒤 사용하면 내년부

터 교통카드 단말기에 접촉하는 즉시 할인받을 수 있다.

19세 이상 성인은 우선 K-패스 카드를 발급받은 후 K-패스 누리집(<https://korea-pass.kr>)에서 회원 가입하고, 매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최대 60회까지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을 사용일 다음달에 돌려받는다.

K-패스를 발급·등록한 광주시민은 올해는 정부의 K-패스 지원율에 따른 혜택을 받고, 내년부터 광주G-패스가 시행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광주시가 지원하는 추

가 혜택을 받는다.

지난 5월부터 시행 중인 K-패스 지원율은 19~34세 청년 30%, 35세 이상 일반성인 20%, 저소득층 53%이다.

내년 시행 예정인 광주G-패스 지원율은 19~39세 청년 30%, 40~64세 일반성인 20%, 65세 이상 어르신 50%, 저소득층 64%이다. 광주G-패스는 청년 연령을 39세로 확대하고, 65세 이상 어르신과 저소득층에 대해 각각 30%와 11%를 추가 지원하는 등 청년과 사회적약자에 보다 두터운 혜택을 제공한다.

광주교통공사의 역할도 확대될 전망이다. 광주교통공사는 광주G-패스 정산업무 등을 수행함으로써 기존의 도시철도 운영사의 한계에서 벗어나 명실상부한 교통종합기관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백은정 대중교통과장은 "광주G-패스는 광주시민이 대중교통을 타면 탈수록 더 많이 돌려받는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이라며 "광주G-패스를 시작으로 광주를 승용차 중심 도시에서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 중심 도시로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이유빈기자

